

“내년 도 예산안, 명목성장률에 못미쳐”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 분석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 10여명은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전북도 예산안은 명목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의 긴축 예산”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주재했으며, 연대회의에 따르면 내년도 전북도가 10조1,597억원 규모로 본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예산 증가율은 3.21%(3,158억원)로, 정부가 제시한 명목성장률 4%보다 0.79%p 낮다. 국고보조금(7%)과 지방교부세(3.4%)는 증가했지만 지방세 수입이 1.3% 줄어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연대회의는 전북도의 상식적 적자재정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총 6,600억원 규모의 차입예산을 편성했고, 같은 기간 발행된 지방채 규모도 3,5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지방채 발행액을 500억원으로 줄였지만, 대신 기금에서 1,110억원을 차입하는 방식을택하면서 ‘채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화’ 가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여파로 재난구호기금 같은 의무적립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보통 세 규모를 기준으로 약 180억원을 적립해야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30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 10여명이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긴축예산’ 진단… 적자·채무 누적, 기금 차입 확대

‘기후 환경 분야·사회안전망 강화 등 예산 반영 미흡’

여러분 반영됐다.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며 도비 88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시범지역을 5개 군으로 확대하고 도비 부담률을 18%에서 3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진안·장수군이 포함될 경우 4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연대회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전북 재정

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19.24%로 유지되고 있는 법정률이 22%로만 인상돼 전북은 최소 1,9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전북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정치·여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 환경 분야 예산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의 환경 예산 비중은 8.15%에 그치며, 기후 대응 기금은 전년보다 감소한 15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정부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북도는 관련 계획이나 용역 예산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지역방송·지역신문 지원 조례 이행 등 필수 사업도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고 꼽았다.

연대회의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예산이 24개 사업 72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올해 역시 집행률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단체는 비판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대안 제시에도 노력한 점이 돋보였는데 신규로 편성된 예산 중 △청년 1인 가구 식생활 개선 요리교실 운영, △청년인권 영화제 분야에 대하여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또한, 특별시법경찰 운영을 통해 자치단체의 특별시법경찰 지원 예산에 대한 확보, 김제 청작농원 잔여축사 매입비 96억원에 대해서는 왕궁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축사 매입 이후의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6월부터 장기간 분석을 진행해 이번 예산안을 평가했다”며 “도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부문별 형평성을 충분히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무보험 차량 균절대책 마련

국토부, 의무보험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운영



률 97%)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연 9만8000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다면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현재 남아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 결과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면서 월평균 적발 건수가 8000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또한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 등도 운영 중에 있다.

김 장관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균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성 기자

‘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시행령 제정과 예산 확보 과정 까지 꼼꼼히 청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윤 의원이 현장 농업인과의 간담회, 국회 심사와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 전반을 주도하며 얻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법안 통과로 이제명 정부의 ‘국가책임농정’ 핵심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다시, 군산으로’

박정희 도의원 출판기념회 내일 군산학생교육문화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이 오는 29일 오후 3시, 군산 학생교육문화관에서 첫 저서 ‘다시, 군산으로’의 출판기념회를 연다.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기록한 첫 저서이다. 군산 시민과 함께한 시간들을 되새기는 의미 깊은 자리다.

‘다시, 군산으로’는 박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의 삶부터 의정활동 과정, 주민들과의 만남, 해결해온 민원 사례, 그리고 교육·복지·청년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고민해온 현장 경험의 담긴 책이다.

단순한 정보보고서가 아니라, 한 정치인이 도시와 시민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뛰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진솔한 기록이라는 평가다.

특히 박 의원은 책의 중심 질문을 “왜 다시 군산인가”로 잡았다. 답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그는 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상을 지켜온 시민의 힘을 이야기하고, 군산이 회복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시 경쟁력, 생활환경 개선, 청년이 돌아오는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박정희 의원은 202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군산시장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전북 ‘K-Food 세계를 치유하다!’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기획세미나가 열렸다.

‘전북 K-Food, 세계를 치유하다’

도의회, 전북형 치유음식 생태계 구축 세미나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이 주관한 전북 ‘K-Food 세계를 치유하다!’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기획세미나가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연구회 위원,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도가 보유한 빌호, 농생명, 로컬푸드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연계하여 K-Food 기반 치유산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과 산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한지혜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사업과 사무관은 ‘치유관광산업법 제정 이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법 제정 이후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등 개별적·단절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는 치유자원들을 관광산업으로 연계·활용하여 효율화할 수 있는 협업 체계가 마련되고,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지원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정민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치유음식의 당위성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손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발효식품, 자연환

/이만호 기자



연탄 나르는 전북선관위 봉사단체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공명이사랑나눔회’는 27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일대의 에너지 취약 가정에 연탄 2,200장을 기부했다. 사진은 공명이사랑나눔회 회원들이 연탄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하루 552톤 소각 폐목재화력발전소 연장 ‘안될말’”

정읍시민단체, 사업기간 연장 불허 촉구

정읍시 영파동에 건설 중인 폐목재화력발전소의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읍시 폐목재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임승식·염영선 의원, 정읍시의회 특별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 회원 40여명은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주거지역 한가운데 하루 552톤의 폐목재를 태우는 시설이 웬말이냐”며 사업기간 연장 불허를 촉구했다.

정읍그린파워(주)가 추진 중인 Bio-SRF(폐목재 고형연료) 화력발전소는 하루 552톤의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해 21.9MWh의 전력과 증기를 생산하는 설비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일반산단이 사실상 폐기물 소각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정작 사업 내용은 착공 이후에야 알려졌고, 초기 설계 과정에서 ‘순수 우드칩 사용’ 등 사실과 다른 정보가 전달됐다”며 절차적 정당성 부재를 지적했다.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경적 우려도 제기된다. 폐목재에는 폐인트·방부제·접착제가 포함된 MDF 등이 다양 섞여 있을 수 있어 소각 시 다이옥신, 포름알데하이드, 중금속, 초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읍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단체들은 “노약자·어린이 등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구 성서산단 Bio-SRF 발전소 사례처럼 사업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단체들은 “환경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조치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읍은 내장산 국립공원과 황토현 들녘을 품은 도시”이며 “잘못된 지원순환 정책과 폐기물 중심 산업단지화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관영 도지사에게 “기업의 이익보다 시민의 생명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우선”이라며 사업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박정희 의원은 202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군산시장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정읍=김대환기자